


 금융위원회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h1>보 도 자 료</h1> </div>				
 금융감독원	보도	2021.5.6.(목) 조간	배포	2021.5.4.(화)	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(02-2100-2830)	담 당 자	김 수 빈 사무관 (02-2100-2833) 김 은 향 사무관 (02-2100-2843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변 제 호(02-2100-2650)		유 은 지 사무관 (02-2100-2653)
	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 신 장 수(02-2100-2620)		송 현 지 사무관 (02-2100-2621)
	금융위 은행과장 김 연 준(02-2100-2950)		이 수 암 사무관 (02-2100-2676)
	금융위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	김 기 훈 사무관 (02-2100-2962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김 종 훈(02-2100-2990)		유 원 규 사무관 (02-2100-2992)
	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(02-2100-2660)		홍 연 제 사무관 (02-2100-2663)
	금감원 감독총괄국장 함 용 일(02-3145-8300)		홍 석 린 팀 장 (02-3145-8001)

제 목 : 금융권 인허가 · 승인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합니다.

◆ 인허가 · 승인 관련한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**예측가능성을 제고**하고 **법적불확실성을 최소화**하겠습니다.

- ① **심사중단요건을 세분화 · 구체화** → 신청인의 권익침해 최소화
- ② **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** →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
- ③ **제도 적용대상을 소업권으로 확대** → 업권간 형평성 제고

□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현행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「금융권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
□ 동 개선방안은 그동안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협의, 법률전문가 자문회의, 금융발전심의회 정책·글로벌금융분과 회의*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되었습니다.

* '21.4.15일(목) 「금융발전심의회 정책·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 개최」 보도자료 참고

- 첫째, 심사중단사유 발생시, 기본원칙 및 해당되는 절차·시점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중단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단요건을 세분화·구체화하겠습니다.
- 둘째, 심사가 중단된 건은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판단하여 재개여부를 검토·결정함으로써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습니다.
- 셋째, 업권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현행 심사중단제도가 규정되지 않은 업권(보험, 여전, 금융지주)에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.

< ※ 제도개선 주요내용 >

구분	현 행	개 선
(1) 중단 사유	▶ 소송·조사·검사 등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 (사실상 기계적으로 중단) - 중단여부 판단을 위한 「가이드라인」 不在	▶ 소송·조사·검사 등이 진행중이더라도 원칙, 절차별 중단요건 충족여부 판단 * (원칙) 중대성, 명백성, 긴급성, 회복가능성 (절차) 조사/제재/검찰고발/기소/재판 등 - 중단요건 관련 「가이드라인」 마련
(2) 재개 절차	▶ 정형화된 재개절차 不在 - 금융위 재량판단으로 결정	▶ 每6月마다 재개여부 주기적 검토 -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결정 (재개요건 未충족시에도 중단 지속여부 판단)
(3) 적용 대상	▶ 인허가 - 일부 업권* * 보험, 여전, 지주사 제외 ▶ 대주주 변경승인 - 쏠업권	▶ 인허가/대주주 변경승인 모두 쏠업권*에 적용 * 보험, 여전, 지주사도 제도도입

□ 동 제도개선을 통해, 법적 불확실성의 해소,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함께, 금융당국의 소극적 부작위 행정 억제로 금융회사들의 신사업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□ 이와 관련, 금융위는 5.3일(월) 업권별 협회 및 연구원과의 간담회*를 개최하여 개선방안 적용대상인 업계의 목소리도 청취하였습니다.

* (참석자) 금융위·금감원, [협회] 은행연합회, 생보·손보협회, 금투협회, 여전협회, 핀테크산업협회, [연구원] 금융연구원, 보험연구원, 자본시장연구원 등

○ 업계는 당국의 자발적 제도개선노력에 환영의 뜻을 비치며, 실제 제도운영과정에서도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당국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.

○ 금융위원회는 당국의 적극행정과 상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운영 간 조화를 이루기 위해 이와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을 설명하면서,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.

□ 금융위는 6월부터 업권별 규정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.

○ 장기적으로는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기간 경과 후 금융당국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, 필요시 추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.

※ 별첨 : 「금융업 인허가·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(案)」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